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2020지역언론 토크_8월4주(1)>

광복절 기념사가 매 맞을 일인가 정치인 발언 나열로 정쟁 부각한 지역 언론

지난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은 7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친일잔재가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고 완전한 친일청산을 촉구했습니다. 9분 남짓의 기념사에는 대한민국 화폐의 얼굴이 되지 못한 독립운동가, 애국가 작곡가의 친일행적,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친일파에 대한 광복회 입장과 함께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한 바람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기념사의 취지와 전체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논란이 된 일부 대목을 발췌해 전부인 양 보도하는가 하면, ‘친일파 묘 이장’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 제안을 ‘파묘 논란’으로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역 언론 기사로는 부산일보 2건, 국제신문 1건이 있었습니다.

국제신문은 8월 18일 자 5면에 <8·15발 보혁 갈등…與는 전광훈, 野는 김원웅 때리기>라는 큰 제목을 달아 거대 양당의 타깃이 된 인물로 김원웅과 전광훈을 소개했는데, 이 큰 제목 아래에 <민주당 ‘광화문 불법’ 통합당 책임론 부각>과 <통합당 “국민 인간질이 매국” 광복회장 못매>라는 작은 제목의 기사가 배치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현실화한 전광훈 목사와 ‘친일청산’을 골자로 기념사를 한 김원웅 광복회장이라는 전혀 다른 사안을 ‘보혁 갈등’으로 뭉뚱그려 상반되는 사안인 양 보도한 셈입니다.

특히 <통합당 “국민 인간질이 매국” 광복회장 못매>(국제신문, 8/18) 은 광복절 기념사에 대한 내용은 일절 전달하지 않은 채, “미래통합당은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데,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와 관련한 국제신문의 첫 기사이자 유일한 기사임에도 기념사 내용에 대한 소개는 빠져있어 결과적으로 독자는 통합당 의원들의 비판으로만 기념사를 이해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기념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중 통합당 의원들의 발언에만 주목하다 보니 기사 제목에서 ‘못매’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기념사 내용 중 일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언론의 역할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와 맥락을 설명해주는 것이지 특정 입장에 편승해 ‘논란’을 ‘잘못’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 겁니다.

8·15발 보혁 갈등... 與는 전광훈, 野는 김원웅 때리기

15주년을 앞둔 8·15보혁갈등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을 통해 '한국이 부강' '민간인 인산 60만'의 국립현충원 파괴 등 잔인한 행상을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보수야권은 '국민 이간질'이라고 사퇴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전광훈 새당세입교외 특사 등이

주도한 보수단체는 광복회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보혁갈등'이라고 명공을 퍼부었다. 광복 75년이 지난 대한민국에 국상한 이념갈등과 전라북부의 광복회장이 겹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광화문 불법' 통합당 책임론 부각

**"방역 방역 당장 멈추라" 경고
홍분표 등 참석자 제명 주장
文 "국민 안전·법치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 특사에 대해 명백을 가하면서 미래통합당 책임론까지 이어졌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 특사의 행동은 감염병 차단 노력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전 특사의 행동에 대한 국민의 연호에 한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일부 국회의 입회 강행은 국가정체 사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치정부를 위한 국민 안전과 법치를 지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히 통합당까지 혼조론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김문선 수석대변인은 "통합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계로 코로나19 위기기는 정치가 아닌 경제 체제로 넘어갈 때를 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서울 용두구 용두리세종로 앞에서 열린 광복 75주년 기념 집회에는 전광훈 새당세입교외 특사가 발언하고 있다.

의 '광복 조망'을 담당할 수"라고 촉구했다. 신원재 의원은 "이들과 1년여를 기다려서 할만한 미래통합당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통합당을 제각했다.

신동근 최고위원 후보는 "유형적 집단 정치와 종교적 의원을 비롯한 일부는 불모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 당 대표 후보는 통합당을 향해 "정의를 입회해 대하는 때도, 전 특사의

이행 재판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정확히 이 정권이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 해태권 의원은 "국가정체체를 무너뜨린 전광훈을 구속해 입회해 채우고 (집회 강행의) 불기름은 '박원순 분할'을 주도한 야권 민주당 대표와 서울시장도 일방적 해태해 한다"고 말했다.

전광훈 코로나 감염에 정치권 발칵

**병소 보수정당 인사와 접촉 찾아
국회 앞 순복음교회 확진자 악재
임시국회 앞두고 여의도 비상**

사망재일교외 전광훈 특사가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치권과 보수야권이 발칵 뒤집어졌다. 보수 기독교계 영향력 이 큰 전 특사는 종교 집회는 물론, 극우 성향 단체들을 비롯해 반정부 집회를 자주 이끌고 있다. 이를 집회 참가자는 대체로 현상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만큼 정치안정성과 접촉이 잦았다. 주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의 인사들이었다. 전 특사 자신도 정치권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서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전 특사가 직접적으로, 또는 그의 주변인들을 통해 여의도 정치권에 바이리우스 바이러스를 가능하게 배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장 우려스러운 정국은 지난 15일 광복을 앞둔다. 수만명이 참여한 집회에 인사로 나선 전 특사가 불확정 다수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온대 정치권 인사들도 상당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회에 참여한 여의도 의원들은 현재까지 불확정 확진자 감염이 유입되게 파악됐다. 홍 의원은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전광훈을 알지도 못하고, 만, 키지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계구 (총신 총신예신)에서 상경한 집회 참가자 명부와 접촉했을 뿐이고, 전 특사가 있던 곳과 멀리 떨어진 장소였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김진태 민중총연 의원이던 당시 집회에 참여한 여의도 의원이다. 이들 외에 또 누가 접촉해 갔는지 정치권에서 상황 불명이 많았다. 이들은 여의도 의원들이 한여름엔 많지는 않다. 그러나 정치권 인맥이 깊고 유 유 또는 재계구나 당원 행사 등을 통한 간접접촉 전파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나타났다. 또한 국회 앞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교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점도 정치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또 18일 8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 국회도 발병에 불안해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임시국회 소위 관이 설치되고 소수 의원들의 출석 가이도카인 등을 통해 국회 고상민정체 불발로 예정이었던 날 했다."

통합당 '국민 이간질이 매국' 광복회장 못매

**"안익태 애국가 친일 노래 메도
이승만도 모욕 - 죽자 사피하라'
김 "통합, 친일비호 스스로 인종"**



미래통합당은 김원웅 (사진)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 대해 영감을 펼쳤다. 미래통합당 최정호 원내총무는 17일 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애국'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애국"이라고 말했다. 김원웅 의원은 "애국"이라고 말했다. 김원웅 의원은 "애국"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광복절 의원은 왜이냐는 것이 바로 매국 행위"라며 "편 나누어 찢어발기고 증오하고", "김원웅 회장은 파직돼야 한다"와 같은 발언을 갈무리했는데, 기념사 내용 일부와 이 일부에 대한 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결합해 논란을 더욱 부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애국했다. 이유는 하나도 단순해 "애국 X", "매국 O" 하는 것은 광복이 보일적"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의 공세에 대해 "스스로 친일비호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이번 기념사가 자신의 개인 생각이 아닌 30여 차례 내부 검토를 거친 '광복회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친일청산 문제는 제의 독립을 넘어서는 지체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념사 전문이 사안에 종사자에 전달됐느냐는 질문에는 "전에 교감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광복회와 민중총연 등에 전달했던 정치 이력이 부각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지만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동력 키우는 부산 여야

**정부 인허가권, 지자체 기관
통합당·시민연대 공조 합의
민주당도 시민단체와 간담회**

부산 여야가 새로운 시행법 체제 채택 '지방분권'의 동력을 키우고 있다. 정치권에서 타계 나오는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등 이슈를 앞둔 상황에서 지방분권 현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4일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 '수도권 재조정'과 '수도권 재조정' 등에 관한 '합의', '수도권 재조정' '재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은 행정수부차에

영양원이 지난 해말까지 등 인허가 권한을 관한 지방자치체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집권체로 권력수도권의 과밀-중증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같은 날 지방분권 동력을 키우고 있다. 정치권에서 타계 나오는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등 이슈를 앞둔 상황에서 지방분권 현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4일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 '수도권 재조정'과 '수도권 재조정' 등에 관한 '합의', '수도권 재조정' '재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은 행정수부차에

▲ 국제신문, 8월 18일, 5면

부산일보 <김원웅 '친일 청산' 기념사 놓고 다시 불붙은 이념 논쟁>(8/17, 8면)은 "해방의 기쁨으로 하나가 돼야 할 광복절이 정쟁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졌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기사의 전반부에 기념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만 소개한 데 이어 통합당 의원들의 원색적 비난들 예를 들면, "국민을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매국행위", "편 나누어 찢어발기고 증오하고", "김원웅 회장은 파직돼야 한다"와 같은 발언을 갈무리했는데, 기념사 내용 일부와 이 일부에 대한 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결합해 논란을 더욱 부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기념사 내용에서 논란이 된 '국립묘지법 개정'은 갑작스러운 제안이 아닙니다. 광복회는 지난 3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이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로부터 '못매'를 맞고 있다' 혹은 '이념 논쟁을 부추겼다'라는 논란거리로만 다루기보다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제안의 맥락과 의미를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었을 겁니다.